

코스피 2537.79 (+22.39)	코스닥 841.82 (+5.83)
금리 (미국 9년) 3.340 (+0.024)	환율 (원·달러) 1326.70 (-7.50)



파월 ‘금리동결’ 시사 짚어지는 ‘침체 그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정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부터 주요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 물가의 둔화 속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금리인상은 정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도 지난 19일(현지시간)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여해 오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생각했던 것 만큼 인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며 “이만큼 멀리 왔으니, 지금은 데이터 전망치의 변화를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평가할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美 물가둔화·고용시장 강세
파월 의장 “지켜볼 여유 있어”

일각선 경기침체 우려 분석도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주목

韓 경제도 대내외 악재 산적

◆ 물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파월 의장이 이처럼 말한 배경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9% 올랐다. 올해 1월 6.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에 진입한 것이다.

다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월 기준 PCE 물가지수는 4.2%로 전달 대비 0.1% 상승했다.

여기에 고용시장은 강세다.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비농업일자리는 25만3000개로 증가했다. 지난 3월 증가폭(16만5000개)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실업률도 3.4%를 기록해 1969년 이후 5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상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줄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임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임금 상승이 또다시 물가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직 금리동결에 명분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미국,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파월의 대답이 경기침체를 우려(예상)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부채한도가 31조3810억 달러로, 지난 1월 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추가로 국채로 발생할 수 없게 된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 막는 조치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고 있다.

내달 1일까지 예산협상이 결렬돼 디폴트사태가 1분기 동안 이어질 경우 증시는 45% 폭락하고, 국내총생산(GDP)은 6.1% 감소한다. 일자리는 830만 개 줄면서 실업률은 5%포인트(p) 오를 수 있다.

여기에 고금리로 소비는 둔화하고,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은행위기 여파에 따라 은행 대출은 까다로워진 상태다. 지난 3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회의 참석자는 올 하반기 미국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초부터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금리인상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경제활동과 고용을 둔화시킬 여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 한은, 오는 25일 성장을 하향 전망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로 올해 1월(5.2%)에 비해 대폭 둔화됐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의 인상되고, 하반기에는 교통요금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물가가 크게 떨어지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에 따른 수혜도 미미하다. 현재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이연수요는 내수증심으로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불허하면서 여행수지 등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하반기 미국의 경기침체로 하반기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고금리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 가계의 소비 여력 약화, 부동산시장 불안 등이 더해져 내수부진이 심화되면 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오는 25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韓美日 “3국 전략적 공조, 對北 억지력 강화”

尹 ‘G7 정상회의’서 숨가쁜 외교전
韓日정상, 韓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윤석열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정상들과 만나 3국간 공조를 굳건히 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3국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의 신속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 6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原爆)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시작으로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등의 숨 가쁜 정상외교 일정들을 소화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전격 참석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 한·우크라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코모라, 한·

인도네시아 등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시다 총리와 역대 처음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原爆)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했다.

이번 공동 참배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총리가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최초이자,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처음 있는 일이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항공 빅딜’ 안갯속… EU 이어 美도 제동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美 매체, ‘법무부 소송 검토’ 보도
합병 무산 땐 1천억 비용 매물 우려
출범 위한 노선반납 시 경쟁력 약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기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에서 미국과 EU가 양사 합병 시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병 무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EU는 두 회사 합병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동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중간 심사보고를 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다. 이어 18일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시작하며 독과점 문제 등을 살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양사 합병 심사 절차를 ‘간편’에서 ‘심화’로 상향했으며 당초 지난해 11월 예정이었던 최종 심사 발표도 연장했다. 이후 미국의

심사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양사 합병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지 매체가 보도한 미국 법무부의 소송 관련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현지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지난 12일 미 법무부와 대면 회의를 통해 미국 측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며, 대한항공과 지속해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尹-젤렌스키, 35분 회동… 우크라 재건 지원 요청 받은 듯 /사진 뉴시스
▲尹, 인니와 정상회담… “양국 협력 속도감 있게 진전”

▲與, ‘대선자금·자금출처·입법로비’ 3대 의혹 겨냥 총공세
▲정개특위,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코인 포함’ 법안처리 예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정부 제안 /사진 뉴시스
▲탈원전 vs 폐기… 전·현 정부 총출 2라운드 고준위방폐물특별법